

[참고자료] 기후소송 결정 1주년 기자회견 발언문 및 기자회견문 전문

[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김서경\(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

[김한나\(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당초초 4학년\)](#)

[권혁주\(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1. 기자회견 순서

청구인 발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2분 30초

김은정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2분 30초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어린이 활동가) - 2분 30초

지지 발언

장법식 변호사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 2분 30초

임성무 대구 화동초 교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 - 2분 30초

권혁주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 2분 30초

기자회견문 낭독

2. 기자회견문

**기후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1년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선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결정의 무게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한 안에 피상적인 결과물을 내놓을지 몰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본질을 살리고 기후위기를 막을 안전한 조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조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진행 중인 위기입니다. 대응을 미루면 사회 불안정성과 피해는 더 커지고 불평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기후위기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나 기술적 수치 논쟁으로만 다뤄져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걸며,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다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국가는 기후위기를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책임이 있다.
- 모든 국민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지금 책임져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한국이 저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지켜지는 제도와 실효적 조치로 담보되어야 한다.
-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 결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권고적 의견을 통해 모든 국가가 1.5°C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가 더 이상 선택적인 ‘추가 노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 두 결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의 대응은 시장 논리에 따르거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목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곧 시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언급되는데, 이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앞으로 더 큰 재난을 떠안지 않도록 지금 위험을 줄이라는 경고입니다. 미래세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 기후위기의 영향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정하여 투영된 미래세대는 현재의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수단에 그칠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주거·건강·생계라는 삶의 밑바탕을 흔드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기후 대응의 마지노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35년의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뿐인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에 둔 기후대응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

3. 발언문

김서경(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안녕하세요. 청소년기후행동 김서경입니다. 5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실천이나 정치권에 대한 요구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요청이나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방치했고,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며 기후대응을 하는 척만을 해왔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계속 키우며,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만을 옹호해왔습니다. 어디에도 위험 속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던 이유는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바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아갈 동등한 주체로 인정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 기후 대응이 이제 막 시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기후 대응이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언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을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위험을 감각하며 살아가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해 이미지로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현재가 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주거/건강/생계라는 삶의 밑바탕을 흔드는 현실입니다. 재난이 일상이 되고,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이 교차하며 불평등은 더 심화됩니다. 미래세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견뎌야 할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후 헌법소원의 결정이 나던 2024년 8월 29일, 우리는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말을 외치며 헌법소원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기후대응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위험을 어떻게 줄이고,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비어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난 속에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리를 중심에 둔 판결을 내린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권리 보유자임을 인정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망 속에서 기후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판결의 의미를 살리고, 우리가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김은정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

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일년 전 현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상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이 조치가 빠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관심속에 내려진 이같은 판결을 두고 충분치는 않았으나 한국정부의 안일한 기후대응에 대한 경고가 되었다는 점, 기후문제가 기본권의 문제임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 또 5년 가까운 시민소송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판결을 반겼고 또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싸움의 시작점에 있음을 기꺼이 받아 안았습니다.

이 판결이 그저 2024년 8월 29일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후 실효적인 조치가 담보되어야 하고 일관된 이행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내 ‘핵타령’을 하다 시간을 허비하고 새 정부는 시급한 전환을 이루어낼 생각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전히 현재 판결에 부합하는 행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2019년 대비 2035년 60%, 2050 순배출 제로의 전지구적 감축경로가 바로 우리가 고려해야할 과학적 근거로 언급하고 있지만 새정부의 장관은 여전히 ‘현실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목표 수립과 기본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역시 어떤 계획들과 내용들이 준비중인지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입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법률에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제각각이고 시민들, 당사자들은 배제돼 있습니다.

얼마전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구체적 의무가 각 국가에 있다는 뜻이며 이를 위반시 피해국에 대해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생명과 존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이 모든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는 지렛대가 될수 있도록, 이를 위해 국가가 마땅한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대한민국 책임에 상응하는 2035 ndc와 기본법 개정이 촘촘하고도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당초 4학년)

결정문: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대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역의 입법적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정치가 멈춘 시간, 기후 위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초초등학교 4학년 김한나입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닐 때,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아기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웃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드디어 헌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국회가 '기후특위'를 구성하며 노력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회의실에서 오간 말들이 폭염과 폭우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재판관님들께서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므로, 국가가 저희를 보호할 입법적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기에 국가가 더 큰 책임감으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주세요. 약속을 미루는 동안 저희의 미래는 불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의무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더 단호하고, 더 큰 목소리로 저희의 미래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저는 부여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권혁주라고 합니다.

처서가 지나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현실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더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장을 지키던 사이 경북에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났습니다. 여름에는 기습적인 물난리로 인해 한 농민은 수확직전의 멜론 수백개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반복되니 작황은 매년 불안정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삶과 소득을 위협합니다. 제대로 된 수확을 위해 들인 땀과 노동이 예상 못한 채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농민들은 수도 없이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작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위협으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또 수입 농산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 기본권 문제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판결의 무게에 맞는 조치는 아직 미흡합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 미래세대 기본권을 제대로 반영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민사회가 제시한 67% 감축안을 토대로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내년 2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현재 판결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거버넌스에 농민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민주적 소통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며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습니다.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길 바랍니다.